

회장 당선됐어도 권한 없다?

소방시설협회, 잘못된 정관 탓 일부 시도회장 권한 축소 22일 총회 열리지만 의결권 행사 못해 논란 '예고'

지난달 열린 선거에서 소방시설협회 시도 회장으로 당선된 일부가 시도회 업무는 사실상 하고 있으면서도 총회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촛극이 벌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소방시설협회의 잘못된 정관으로 일부 시도회장이 지난달 당선됐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아직까지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선거를 통해 당선된 소방시설협회 시도회장 일부가 오는 22일 열린 소방시설협회 총회에서 의결권도 갖지 못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곧 열릴 총회에서도 이 문제로 인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비슷한 전문시공분야 단체인 전기공사협회나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연임하더라도 회원들의 뜻에 따라 별다른 승인 과정 없이 바로 시도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소방시설협회

가 과거 선거 없이 시도회장을 선임하던 시절 정관에 담긴 조항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어서다.

소방시설협회 정관 제4장 25조에서는 '시도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총회의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정한다'고 적혀있다.

소방시설협회가 설립된 지난 2011년 이후 1, 2대 시도회장들의 경우 중앙회장이 직접 임명했다. 때문에 이들이 연임하기 위한 조건을 정관에 담긴 것은 당연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3대 시도회장부터 선거제가 도입됐고, 중앙회장이 아닌 회원들의 뜻에 따라 각 지역을 대표할 시도회장이 선출됐다. 문제는 3대 시도회장 중 4대로 연임해 당선된 회장들은 과거 임명제 시절과 같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열린 선거에서는 총 13개 시도회 가운데 12곳에서 시도회장이 선출됐다. 이들 가운데 5명이 지난 임기에 이어 다시 당선됐다. 12명의 시도회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명이 제대로 된 권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방시설협회는 이미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2016년 정부에 정관변경을 요청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았다. 당시 국민안전처가 정관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 같은 논란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두고 "회원사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회원들이 직접 손으로 뽑은 회장이지만, 총회 승인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원들이 뜻을 합쳐서 뽑은 시도회장을 총회에서 다시 의결에 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협회는 과거 시도회장을 임명하던 시절이나 적용됐던 정관을 빠르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

조달청, 이번주 총 3700억원 발주

조달청이 한 주간 총 3700억원 상당의 발주를 진행했다.

조달청은 19일부터 한 주 동안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야구장 조명타워 시설개공사업 스포츠조명기구 구매' 등 총 298건, 약 1045억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경찰청 '경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 등 총 339건, 약 1376억원 규모의 용역 입찰 등 총 2421억원 규모의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계약방법별 입찰 내용을 살펴보면 물품 분야는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매설치 사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24.7% 259억

리(2단계) 용역' 등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5% 199억원, 기타 전체금액의 8.8% 121억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분청 695억원, 서울지방청 452억원 등 2개청(1147억원)이 전체 금액(1788억원, MAS 2단계 제외)의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641억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보령~성주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45건, 1298억원 상당의 공사입찰도 집행된다.

물품·용역 분야 2421억·공사 분야 1298억...45건 달해 집행건수 77% 지역제한 혹은 지역외 공동도급 공사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인류관 조성사업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6% 17억원, 국군수도병원 의무장비 X선기 혈관 조영촬영장치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0.0% 104억원,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3.1%인 32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하남갑골 B-5BL 아파트건설공사 합성수지창호 제작 및 설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60.6%인 633억원으로 진행된다.

또 용역 분야는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67.4% 928억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9.3% 128억원, 전남개발공사 '남약신도시 오토지구 연약지반 침하안정관

이번주에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한류초 및 한류유치원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공사' 등 집행건수의 77%인 35건이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외 공동도급 대상공사다.

이 중 지역제한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1건에 482억원, 지역외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제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외공동도급 공사는 4건에 264억원이다.

지역외공동도급공사로 인해 전체의 46%가량인 6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지역외체가 수주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했다.

지역별 발주량으로는 충남도 297억원, 경기도 279억원, 전남도 254억원, 서울시 192억원 등이다.

계약은 적격심사가 40건(1295억원), 수의계약이 5건(3억원)으로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윤대원 기자

제18대 전기기술인협회장 후보 기호추첨

기호 1번 이종언·기호 2번 김선복·기호 3번 엄정일·기호 4번 형남길 후보

제18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기호추첨에서 이종언 후보가 기호 1번을, 김선복 후보가 기호 2번을, 엄정일 후보가 기호 3번을, 형남길 후보가 기호 4번을 각각 뽑았다.

전기기술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실)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8대 중앙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기호추첨을 실시했다.

후보자들의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추첨 결과 이종언 후보(공주대 교수)가 기호 1번을, 김선복 후보(서전일렉스 대표)가 기호 2번을, 엄정일 후보

(대경기술단 대표)가 기호 3번을, 형남길 후보(동부전기 대표)가 기호 4번을 각각 선택했다.

또 이어진 감사 기호추첨에서는 김지경 후보가 기호 1번을, 허만일 후보가 기호 2번을, 김동환 후보가 기호 3번을, 김중철 후보가 기호 4번을 각각 뽑았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이날 회의 및 기호추첨에 앞서 각 후보자들이 접수한 서류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회장 입후보자 홍보자료 제작 기준과 선거운동 유의사항 등 세부 안건도 논의했다.

이석희 기자 xixi@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 취임 후 첫 현장점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15일 최근 지진이 발생한 포항시 북구 일원을 찾아 철도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김 이사장은 포항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는 강릉 지역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국민의 신뢰를 위해 최고 품질의 철도건설과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겠다"며 "남은 올림픽기간 동안 철도교통이 완벽한 수송지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LH, 지역내 주거복지 향상 '손 맞잡아'

저소득층 124가구 대상 주택 개보수 지원 협약

제주시가 지역 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LH와 손잡았다.

17일 제주시는 LH 제주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와 LH는 주거급여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입, 저소득층 124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거급여 수급 대상 가구 중 주택 구조의 안전성 및 최저주거기준 설비상태 등 주택 상태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지원 금액은 확정 순위에 따라 한 가구당 ▲대보수 1026만원(13가구) ▲중보수 702만원(15가구) ▲경보수 378만원(47가구) 등의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지붕보수, 주방개량, 단열난방공사, 도배, 장판 교체 등이 이뤄지며 장애인이나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강태환 제주시 주택과장은 "LH 제주시본부와 이번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동안 주거 환경이 불안정했던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의 향상과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대원 기자



고경실 제주시장(왼쪽)과 고권홍 LH 제주지역본부장이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속철 방음벽...' 등 4건 '교통신기술'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철도 방음벽 설치용 소음저감장치', '화물취급선용 이동식 전차선시스템', '집광식 내부조명 표시판 및 안내표지 제작기술', '터널용 고무차륜 AGT 분리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주행로' 등 4건을 '교통신기술'에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속철도 소음저감장치는 도로소음과 다른 고속철도 소음의 주파수를 분석해 해당 주파수를 감소시키는 장치다.

장치 내부를 격자모양으로 설치한 것만으로 도로 방음벽을 2~3m 높이는 것과 동일한 소

음저감 효과를 낼 수 있어 향후 타산업에서도 활용이 기대된다.

화물취급선용 이동식 전차선시스템은 열차에서 화물을 상하역할 때 전차선의 이동이 가능하게 한 기술로, 열차도착을 감지하는 레이다센서와 전차선을 회전시키는 구동형 브래킷을 통해 구현된다.

기존에는 화물 상하역 시 디젤기관차가 전차선이 없는 선로로 이동해야 했으나, 이 기술의 개발로 화물을 전기기관차로 이동하고 전차선이 있는 선로에서도 상하역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디젤기관차 이용에 따른 동력비 부담이 줄어들고, 배기가스 배출 감소, 물류처리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집광식 내부조명 표시 제작기술은 조명식 도로표지판 내부에 프리즘 집광필름과 블라

인드 필름을 적용, 색 번짐 현상을 줄이고 표현 문자의 선명도를 높인 기술이다.

이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면 야간, 악천후 등의 상황에서 운전자의 가독성을 향상시켜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터널용 고무차륜 AGT 분리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주행로는 고무차륜 경전철(AGT) 주행로 시공기술로, 공장에서 주행로를 패널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기술이다.

주행로의 급곡선 구간 설치는 물론, 공정·보수가 쉬워 향후 본격적인 현장 적용이 기대된다.

김광국 기자 kimgg@

◆ 공사업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 빠르고 안전하게 회사를 인수받고 싶으십니까
◆ 면허 양도 후 공법인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 회사를 제대로 평가받고 매도하고 싶으십니까

공사업 양도양수 전문!

양도양수 **전기공사** **분할합병**
법인전환 **통신공사** **신규등록**
소방공사

"1:1 맞춤 출장 상담 가능 ☎ 010-5268-4436"

(주)건설뱅크 <http://www.clbank.co.kr>

서울본사 TEL 02-567-8986 FAX 02-567-3453
경남지사 TEL 055-763-6677 FAX 055-763-6678

전기공사협회 네트워크

충북도회, 충북도청 맹경재 경제통상국장 면담

충북도회(회장 이일섭)는 최근 충청북도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을 면담하고 충북지역 전기공사업계 현안과 발전을 위한 업계 여론을 전달했다.

이날 이일섭 회장은 지역 건설공사가 전기공사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을 요청했다.

현 충북 조례의 지역 업자의 하도급권장 비율은 50%로 전국 평균 약 59%에 미달한다.

이에 지역 전기공사사업계의 참여 확대와 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중 하도급권장 비율을 '업종별 7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